

제21대 정부의 정책방향과 산업영향 전망

EY한영 산업연구원

June 2025

Insight Report #25-056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1. 거대 여당 정권 출범에 따른 정책 동력 확보
2.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
3. 산업계 영향 전망

제21대 대통령 선거 - 거대 여당 정권의 탄생

'24년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 과반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향후 거대 여당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였음

대통령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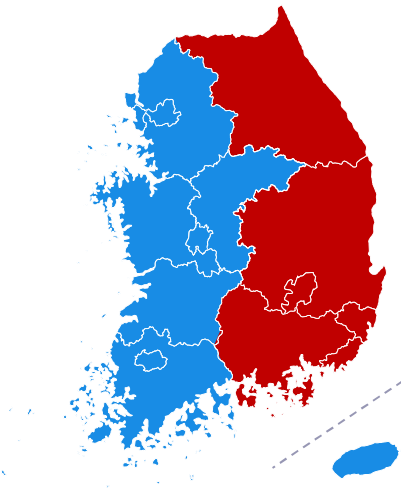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김문수(국민의 힘)



17,287,513 (49.42%)



14,395,639 (42.15%)



국회 의석 분포

더불어민주당

169명

국민의 힘

107명



재적의원
298명¹⁾

*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

-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97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이재명 당선인은 전체 득표수에서 김문수 후보를 289만 표 차이로 앞서며 승리를 거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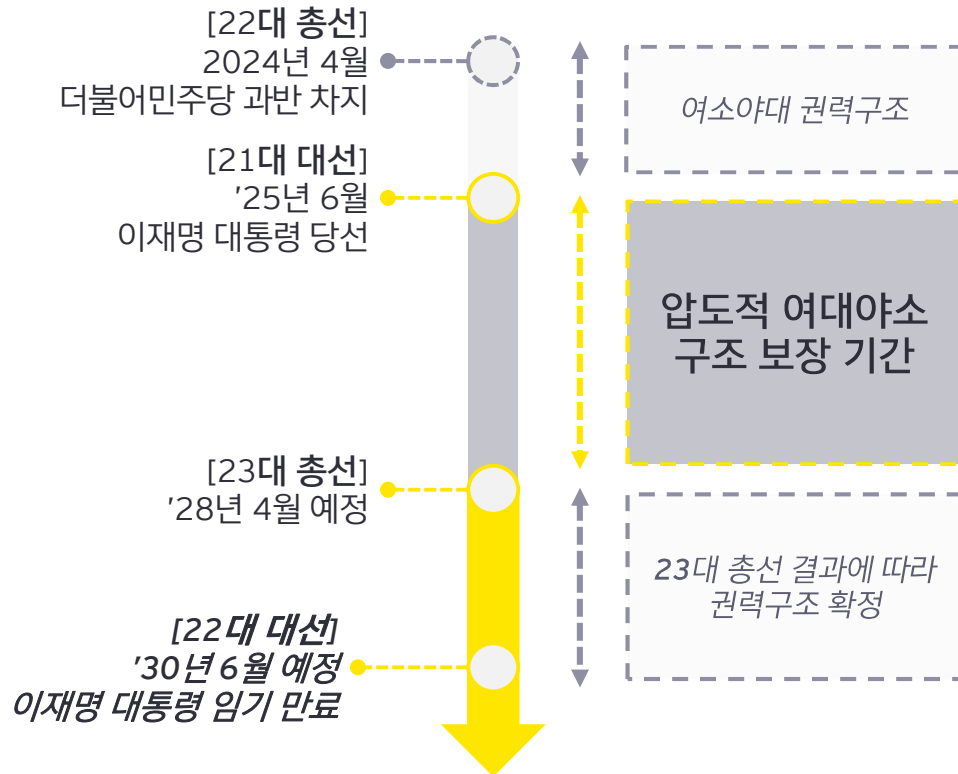
국회 주도권 장악

-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여당이 되어 국회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법안·예산 처리 등에서 단독 추진이 가능해짐
- 국민의 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영향력이 크게 감소함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 동력 강화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총선 및 대선에 따른 권력구조



정책 추진 동력 강화

정책 추진 장애요소

입법·행정 동시 장악에 따른 정책 추진력 극대화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개혁 입법, 예산안 등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

정책 실행의 속도와 효율성 제고
국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복지·경제·교육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의 입법과 집행이 지체 없이 진행 가능

정치적 교착 완화
이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반복됐던 국회-행정부 간 극한 대립과 입법 공회전이 상당 부분 해소

제도 및 실행조직 제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조정, 정책 시행 조직인 관료 저항 및 관성 등으로 인해 정책 효과 체감 속도에 제약 가능성 존재

여론 갈등으로 인한 실행 부담감 존재
야당, 기득권 저항 및 정책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한 갈등 시 추진 동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음

거대 여당 정권의 정책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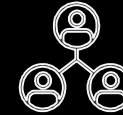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 영역



- 세종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지방 경제 활성화
- 대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 육성
- 디지털 / AI 등 신사업 강화
- 전통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강화

정치/ 사회 영역



- 권력기관 개혁
- 기본소득
- 노동권보장 및 금융시장 주주권리 강화

외교/ 국방영역



- 남북 관계 복원
- 중국/러시아 관계 복원



Contents

1. 거대 여당 정권 출범에 따른 정책 동력 확보
2.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
3. 산업계 영향 전망

제21대 정부의 추진 방향성 및 추진 공약

경제, 외교/국방, 정치/사회 각 영역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10대 공약을 통해 실현될 것임

확장적 재정정책 / 큰 정부 지향

더불어민주당
추진 방향성

대통령
10대 추진 공약*

경제 영역



「성장」

- 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 ③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 공정경제를 실현
- ⑥ 세종 행정수도와 '5곡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⑩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외교/국방영역



「회복」

- ② K-민주주의 위상 회복
- ④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구축
- 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정치/사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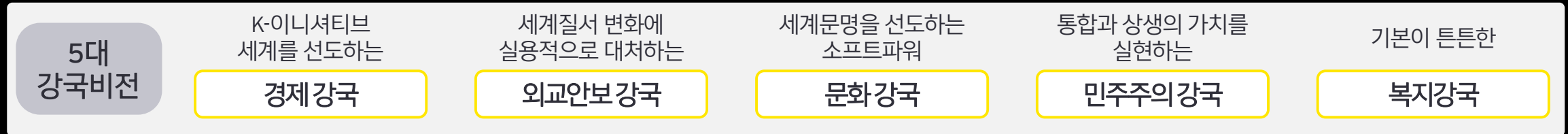
「행복」

- ⑦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⑧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⑨ 저출생·고령화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번호는 공약집 정책우선순위

[Back-up] 제21대 정부의 5대 강국 비전 및 정책 공약

‘5대 강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제21대 정부의 10대 공약은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음



Keyword : 회복 성장 행복

대통령
10대 정책
공약*

-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성장**
↳ 주요정책 : AI 등 신사업 육성, K콘텐츠 수출 등
- 2** K-민주주의 위상 회복 **회복**
↳ 주요정책 : 정치보복 관행근절, 국민통합 등
-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증진, 공정경제 실현 **성장**
↳ 주요정책 : 소상공인 채무 조정, 상법개정 등
- 4** 외교안보 강국 구축 **회복**
↳ 주요정책 : APEC 개최, 한반도 비핵화 등
-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회복**
↳ 주요정책 : 흉악범죄 예방, 사회적 재난 신속 대응 등
- 6** 세종 행정수도과 '5극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성장**
↳ 주요정책 :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 광역급행철도 등
-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행복**
↳ 주요정책 : 노동조합법 개정, 성별 임금격차해소 등
-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행복**
↳ 주요정책 : 아동·청년·어르신 지원 확대, 반려동물 양육비 완화 등
-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행복**
↳ 주요정책 :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등
- 10**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성장**
↳ 주요정책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번호는 공약집 정책우선순위

경제영역 추진 공약 상세(1/2)

경제영역의 공약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중심 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벤처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및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체계를 갖추는 부분 역시 강조하고 있음

Keyword : 성장

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목표

- AI 등 신사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정책 이행 방향

- 인공지능 대전환(AI)을 통한 AI 3강으로 도약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③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목표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정책 이행 방향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지영업자활기도모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 값 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상법상 주주총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경제영역 추진 공약 상세(2/2)

경제영역의 공약은 SI를 중심으로 한 기술중심 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벤처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및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체계를 갖추는 부분 역시 강조하고 있음

Keyword : **성장**

⑥ 국토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와 '5극3특' 추진

목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정책 이행 방향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⑩ 기후위기 대응

목표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정책 이행 방향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 한반도)
- 탄소중립 산업전환(국산화)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건축물 열 부문 탈탄소화(민간·공공 그린 리모델링 지원 확대)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수송부문 탈탄소가속화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외교/국방영역 추진 공약 상세(1/2)

외교/국방 영역의 공약은 국민통합, 실용적 외교, 기술/물류/식량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음

②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목표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정책 이행 방향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강화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검찰 개혁 완성, 사법 개혁 완수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민생·인권 친화적 제도 개선,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④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구축

Keyword : 회복

목표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정책 이행 방향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외교영역 확대 및 다변화(공급망방산인프라 등 EU,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안보 실현,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외교/국방영역 추진 공약 상세(2/2)

외교/국방 영역의 공약은 국민통합, 실용적 외교, 기술/물류/식량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음

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Keyword : 회복

목표

-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정책 이행 방향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흉악범죄·묻지마범죄 예방,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및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 도입 확대,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정치/사회영역 추진 공약 상세(1/2)

정치/사회 영역의 공약은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 처우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음

Keyword : 행복

⑦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⑧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목표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목표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정책 이행 방향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정책 이행 방향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환경 개선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정치/사회영역 추진 공약 상세(2/2)

정치/사회 영역의 공약은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 처우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음

⑨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Keyword : 행복

목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정책 이행 방향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공제 한도 상향 추진, 초등학생 여체능학원 ·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 · 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 · 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

Contents

1. 거대 여당 정권 출범에 따른 정책 동력 확보
2.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
3. 산업계 영향 전망

주요 정책 공약 실행에 따른 산업계 영향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21대 정부의 정책공약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리스크 완화, ESG 대응, 고용유지 및 창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약 항목

- | | |
|-----------------------------|-----------------------------------|
| 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 ② K-민주주의 위상 회복 |
| ③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증진,
공정경제 실현 | ④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구축 |
| 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⑥ 세종 행정수도과 '5극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 발전 |
| ⑦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 ⑧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 ⑨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 ⑩ 기후위기 대응 |



‘ABCDEF’ 전략산업 중심 생태계 육성

새로운 정부가 계획하는 성장방안은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위, 에너지, 제조업)’로 요약되는 전략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R&D 투자와 산업 생태계 육성을 골자로 하며, 이와 관련 영역들에서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됨

ABCDEF 전략산업	Key Message	핵심 정책
 A 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해 AI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활용 가능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산업 전반의 AI 활용 기반 마련 AI 부트캠프 통해 기술 인재 10만 명 양성, AI를 전략산업으로 육성
 B io/Healthcare (바이오, 헬스케어)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특화 전략 기반 R&D·금융지원 및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
 C ontents/Culture (콘텐츠, 문화)	“문화예술 예산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수출 확대와 브랜드·디자인 경쟁력 강화로 K컬처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
 D efense (방산, 항공우주)	“방산 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 R&D 투자 확대 및 협력국 지속 발굴
 E nergy (에너지, 환경)	“RE10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자립·안보 강화 위해 석탄·LNG 비중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전력 분산, 서남해안을 신재생 산업 거점으로 육성
 F actory (제조업)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강력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철강·석유화학 중심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핵심 산업 분야 (1) - 인공지능

AI 3강 도약, 모두의 AI 등의 정책이 주요 드라이버가 되어 많은 AI 전문기업들의 등장이 예상되고, 투자유치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함

주요 정책



- [AI 거버넌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AGI 학습데이터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AI 3강 도약] AX*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AI기술중심 스타트업 활성화 및 활용격차 해소
- [미래인재 양성] AI·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디지털 문해력 강화, 해외인재 유치 및 R&D 지원 확대
- [모두의 AI] 'AI Testbed Korea' 건설, AI 접근권 보장
- [첨단산업구조] AI 등 국내 첨단전략 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신사업·성장동력 발굴 육성
- [투자활성화]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비즈니스 시사점

- AI 시장 활성화로 전문 기술기업 등장 확대
- 신성장 분야 지원으로 혁신기업 성장 및 국내 투자 유치 기회 증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유치 추진으로 고급 인력들의 관심 증대



고려 사항

- 단시일 내 AI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AI 데이터 센터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 기업 내부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화가 선제 조건임

핵심 산업 분야 (2) -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기존 규제 영역이 제도화를 통해 합법화되는 부분, R&D 관련 투자 지원 등을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 개발, 시장 확대 등의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음

주요 정책



- [데이터 활용 법 제도 마련]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추진
- [공급체계 마련]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 [세제 혜택]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건강보험 개편] 건강보험 수 개편 및 급여대상 확대
- [디지털 헬스] AI홈 닥터 합법화 추진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



비즈니스 시사점

- 산업별 데이터 결합·활용으로 Cross Sector 비즈니스 모델 등장 가능
- 디지털 헬스 제도화로 리모트케어, 디지털 치료제 등 신규 서비스 론칭의 기회 확대
-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으로 R&D를 통한 신약 발굴 기회 확대



고려 사항

- R&D 투자 측면 성과회수까지 장시간 소요에 따른 리스크 검토 필요
- 기존 의료계의 저항 등으로 실제 사업화까지는 시간소요 또는 지연가능성有
- 약가인하압력에 따른 전통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가능

핵심 산업 분야 (3) - 콘텐츠, 문화

민간주도 성장 분야였던 콘텐츠, 문화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정책금융 확대,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제도 선진화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 내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주요 정책



- [빅5의 문화강국 실현]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 한류페스티벌, K콘텐츠 마켓 확보, 문화 외교 강화
- [국가 지원 강화] 콘텐츠 신성장 및 원천기술 지원 분야 확대,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확대
-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및 K 콘텐츠의 IP 확보
- [자생력 강화] 현장 문화정책의 반영을 위한 문체부 산하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설치
- [방송 / 미디어 법 개선] 방송/미디어 규제의 형평성 및 규제체계의 선진화
- [디지털 크리에이터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크리에이터 산업 표준계약서' 마련

⋮



비즈니스 시사점

- 자사 IP의 글로벌화 전략 수립 필요 (예: 로컬화, 번역·재편집, 글로벌 플랫폼 연계)
- K-컬처 글로벌화로 타 산업 파급효과 기대



고려 사항

- 규제에 따른 Compliance 이슈 대응 필요
- 제작 및 운영비용 상승 가능성

핵심 산업 분야 (4) - 방산, 항공우주

방산 영역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대표적 분야로 국산화 과정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게도 많은 사업기회가 예상되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함

주요 정책



- [세액 감면 및 펀드 확대] 방산수출기업의 R&D 투자세액 감면 및 방산 지원 정책 펀드 확대
- [국방 첨단기술기반 구축] 국방 AI 기반 구축을 통한 지능형 무기체계 전력화
- [R&D 지원] 위성정보 활용을 포함한 우주 산업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
- [세제 혜택] 우주항공을 포함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협력 강화] EU 및 유럽지역 첨단과학기술, 공급망, 방산, 인프라, 인적교류 등 실집 협력 강화
- [전략사령부 창설] 군 역량 강화 방안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비즈니스 시사점

- 국내생산 촉진, 지능형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국내 시장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향상 기대
- 방위산업 고도화 관련 품목 영역에서의 사업기회 확보
- EU 등 수출 채널 다변화를 통한 시장 확대



고려 사항

- 지정학적 영향 등 외부효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국내 방산 시장 확대에 따라 EU 및 미국 등의 견제 가능성 상존

핵심 산업 분야 (5) - 에너지, 환경

RE100 실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환경 영역 주요 정책들로 인해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신규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 준수 과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저탄소화' 글로벌 기준 대응 측면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주요 정책



- [경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그린수소, CCUS 등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지원 강화
- [RE100 실현] 석탄발전소 폐지 추진 및 태양광, 풍력에너지 확대하고 RE100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및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 [미세먼지 감소]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 화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전기/수소차 판매 추진
- [탄소중립 산업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사업재편 지원,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지원

⋮



비즈니스 시사점

- 에너지 인프라, EV 등 친환경 산업에서의 신규 비즈니스 진출 기회 확대
- 국내 제조 기업들의 RE100 등 재생에너지 활용과 저탄소화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역량 강화



고려 사항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시 발생 가능한 지역 반발 이슈로 경영리스크 증대 가능
-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으로 단기적 운영 비용 증가 위험
- 전통 제조기업은 RE100 등의 규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핵심 산업 분야 (6) - 제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 영역의 기업들에 많은 정책적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에, 타 영역에서의 규제는 동시에 기업 운영 측면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요 정책



- [첨단제조 강국]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 추진, 현장 맞춤형 첨단 인재 양성
-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균형발전 기여 강화(특구, 특화단지 등)
- [기술역량 강화]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 안정화 위한 소재부품 장비 정책 추진(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 [공급망 강화/인프라 마련] 공급망안정화 기금 확대, 팹리스 육성 및 소부장 기업 R&D 지원 확대
- [자금공급/투자활성화] 첨단전략산업 기금 설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확대,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투자 세제지원 확대

⋮



비즈니스 시사점

- 첨단 산업 특구 또는 특화단지 지정 시 기업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R&D/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세제지원 등으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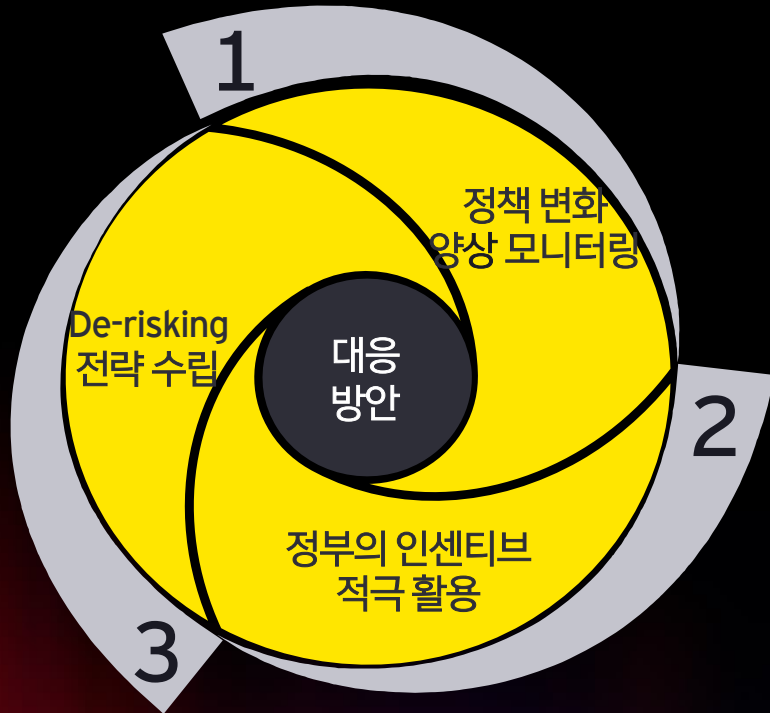


고려 사항

- 전통제조업 소외가능성
- 반도체 등 국내 생산 확대 시, 미국 수출 관세 부담 가중
- 고급 제조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거나 에너지 비용이 상승 시 성장동력 약화 가능

정책 분석에 따른 EY한영 제언

강한 정책 추진 동력을 지닌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따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 프레임이 빠른 시일 내에 재편될 것이고,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정책 기조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신정부 출범은 산업 전반의 정책 재편 가능성을 수반하기에, 정권 초기 단계에서의 면밀한 정책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

01 정책 변화의 속도와 실행력 예의 주시

- 부처별 정책 발표 및 입법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수립
- 국회 입법 추이 및 예산 반영 여부에 따른 실행 가능성 평가
- 경영 회의체 또는 TF를 통한 정책 리스크 및 기회 신속 공유

02 정부의 지원책 적극 활용

- 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 등 부처별 인센티브 맵 구축 및 사전 대응
- 세제 지원, R&D 보조금 등 유형별 신청 준비

03 De-risking 전략 수립

- 환경, 노동 분야 등 기업 운영 관련 규제 영향 분석 및 대응 체계 구축
- 정책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파일럿·유보 등 단계적 접근 적용

Contacts

EY한영 산업연구원

권영대 파트너

young-dae.kwon@kr.ey.com

산업연구원장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실무총괄

정현종 이사

hyun-jong.jeong@kr.ey.com

EY한영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부문 ASC

이정훈 매니저

jeonghun.lee@kr.ey.com

조아미 시니어 컨설턴트

amy.killick@kr.ey.com

최도영 컨설턴트

do-young.choi@kr.ey.com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5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239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